

제349회 국회
(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2월24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1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2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3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10시06분 개의)

충분히 오전 중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소위원장 김진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
합니다.오늘 심사 안건은 국토교통위에서 회부된 공동
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을 선정했습
니다.안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크게 쟁점이 되는
법률안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
이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는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10시07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쪽입니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의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2월 29일 날 대체토론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할 경우에 일부 입주자단체가 관리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소위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사단체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인데, 3쪽에 보시면 현재 주택관리사단체가 운영 중인 공제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주택관리사 공제라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원보증 공제는 경리 등 관리직원·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 공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주택관리사 공제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관리협회라든가 일부 단체 등에서 관리비 부담의 증가 요인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2소위에 회부가 된 건데……

이 사안들을 살펴보면 이게 6~7년 동안 공제 상품을 운영해 왔고 또 지금 이 비용 부담을 가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법정화한다고 해도 크게 관리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2차관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소위원장 김진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현재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만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확대되는 대상자도 현재 개인 일반보험 등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업무의 범위 확대와 관리비 증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특별하게 없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관리비 증가 요인 같은 것이 없다고 검토가 되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11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의 대체토론에서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런 경위로 해서 2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설치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동차고지의 설치 및 임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된 이후에 관계부처가 논의를 해서 공동차고지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되, 재정지원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렇게 된 거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면, 수석전문위원님.

비용 규정은 없더라도, 지금 이대로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네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이런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서 이런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일단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행자부·기재부·지자체·택시업계 등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한 결과 정의 조항만 넣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데 동의를 모두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의 규정만을 두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

에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택시의 경우도 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버스나 화물차,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공동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운송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하면, 그곳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니까 운송사업자 스스로 확보해서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전제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동차고지가 아니라 개별 택시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러니까 공영차고지하고 공동이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직접 재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공동차고지는 택시회사끼리 연합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택시회사만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주광덕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주광덕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 그래서 약간 법문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이, 개별사업자가 택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주광덕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택시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운송사업자 하나로는 안 되고 또 개인사업자도 안 되고 운송사업자 2개 이상이라는 복수의 그런 의미 아닌가요, 이 법문의 뜻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런데 공동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니고 2명…… 공동이라고만 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이나, 3명 이상이나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저한도, 공동의 기본 최저한도 요건인 2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희는 택시 차고지 확보에 더……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용어로 쓸 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2인이 꼭 사람 2인인 듯한, 사람 2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런데 보통 법상으로 2인 하면 법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백혜련 위원 법인까지 포함하니까 2인인데 꼭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시다는 얘가지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합한 용어를 찾아보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가지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발언 신청하고 해야지, 너무 자유롭게……

○주광덕 위원 아니 아니, 질의를 소관 부처 차관한테…… 이것을 성안한 부처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는 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하는데 한번 다른 입법례들을 참고해서 만약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진태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세요.

○조응천 위원 순서 좀 지켜세요.

여기 2인 이상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택시업자 둘이서 ‘우리 그린벨트지역 저기 훼손해 가지고 만들자’ 하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개인택시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조응천 위원 그러면 2인이라는 게, 이게 법문상으로는 개인택시 2명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는데……

○백혜련 위원 택시운송사업자라는 개념에 개인택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응천 위원 개인택시도 사업자지요.

○윤상직 위원 예, 개인택시, 사업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것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명확히 입법례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또 하나 더 말씀 올릴 게……

○소위원장 김진태 어떻게 명확히 수정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것은 지금……

○조응천 위원 그러면 서울시 택시사업자 둘이,

서울은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다가 그냥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경기도 쪽의 그린벨트.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김희천 국토부 택시산업팀장 김희천 서기관입니다.

○조응천 위원 예.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김희천 경기도에도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할 관청이 아닌 데에다가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조응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실제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도시들 50% 이상, 60%~70%까지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하다 보면 나중에 계획 세워 가지고 제대로 번듯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택시 차고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서 난개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사업자는 일단 제외한다 치더라도 법인택시들의 경우에도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인 이상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정말 아마 택시 법인들이 다 분할할 겁니다.

○조응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분할 많이 해요.

○윤상직 위원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린벨트 들어가고 할 거라고. 이 부분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취지가 공영이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동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큼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를 넣어서 몇 대 이상이라든가 상당한 규모의 어떤 제한이 있어야지……

○조응천 위원 동일 사업자가 가려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윤상직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GB법, 그린벨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대 넘어 가고 150대 되는 큰 회사들, 이미 다 분리해 가지고 2개, 3개 막 만들

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회사들도 법인 분리해서 ‘우리 2인 이상 공동이다’ 해 가지고 막 만들면 이것은 괜히 택시업계가 또 영세화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무것도 없이 택시사업자만 배불려 주는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택시사업자도 되지만 또 택시연합회나 단체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아니, 좋다 이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이용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작년에 해 준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잘 통과가 안 되다가 지금 공동차고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통과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인 이상의 사업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대, 50대 있는 2개 회사보다 100대, 200대 있는 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1인의 경우도 이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그런 공동차고지, 전용차고지라 하더라도 그것의 설치를 막을 이유가 없는 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이 규정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국토개발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차고지를 두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아니라 1인 회사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50대, 50대 있는 회사와 200대 있는 1개 회사의 차별성을 둘 수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린벨트 내에 온통 차고지로서 용도 변경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또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법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국토개발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지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입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린벨트에 모든 택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보다는 공동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차고지라는 용어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인이 아까 말한 대로 한 회사에 50대 50대씩, 2개의 회사가 100대인 경우와 한 회사가 200대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200대인 경우를 설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동 여부를 떠나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이용주 위원 그것은 결국에는 무제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장 김진태 잠시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한번 좀 감안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기로 내려왔을 때 그 지적 사항은 비용 주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소관 부처에서 완전히 그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될 것인가를 법사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조금 우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저쪽에서도 양보했으니까…… 이것은 또 근거 규정만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는 되었고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하부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 운용을 할 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2인 이상 이것은 그냥 두

고 가나요?

○주광덕 위원 아니, 이것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고유업무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오신환 위원 개인택시사업자가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구 수정할 때……

지금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태양광 사업자들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면 REC에서 요금에 좀 더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쪼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난개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격거리를 200m씩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200대를 가지고 있다, 회사를 갖다 나, 내 마누라 이렇게 쪼갭니다. 사실은 동일인이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저희가 운영에 문제가……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나중에 큰 문제 생기니까 이 부분도 자구 수정하실 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안 그러면 또 부하직원 시켜 가지고 회사 쪼개 놓고 야도이 사장시켜 놓고 말이지요.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용도의’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진행 중인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우리 부 내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국토부 내에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정의 규정을 통해서 공동차고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하시면,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진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부쳐 주세요. 시행령 개정할 때 국회 우리 상임위에, 우리 법사위에서 받는 것은 좀 이상한데, 법사위 지적이 있었는데 국토위에서……

○주광덕 위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달면 되지.

○윤상직 위원 보고하고, 법사위에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님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께.

○조응천 위원 보고를 하세요.

○이용주 위원 상임위에 보고를 하세요.

○주광덕 위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윤상직 위원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도 보고해주세요, 서면보고도 괜찮고. 우리가 의견을 줄 테니까요.

○주광덕 위원 참고적으로 소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되고, 공식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28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12쪽입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원회에서 다 협의가 돼서, 개인식별번호를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5쪽입니다. 현행 2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강제징수권이 있는 유료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만 미납통행료의 부과·수납 또는 강제징수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 사항에 관한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단서를 하는 그런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유료도로관리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국가가 관할하는 국가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지자체가 관할하는 민자도로는 지자체장이 됩니다. 정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보고드렸듯이 지난번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우려를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진태 예.

○조응천 위원 자료 17쪽에 보면 개정안하고 수정의견 있잖아요. 21조의3의 2호 괄호 안에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를 말한다’, 옆에 수정의견은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게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개정안은 ‘감면받은 통행료를 말한다’, 수정의견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조응천 위원 개정안이 잘못된 것이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잘못된 것

인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입법조사관 정해성 조사관 정해성입니다.

‘내지 아니한 통행료’라는 정의에 원래 내야 할 통행료가 있는데 거기서 감면받았으면 그것을 빼고 남은 돈이 안 낸 통행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의 괄호 안에 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빠져야 되는 그 통행료가 내지 아니한 통행료가 아니라 갠 감면받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고 남은 돈이……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것을 반대로 써 놓은 것이네.

○입법조사관 정해성 예,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1호 통행료 감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감면받았던 사실은 제공하고? 그런 거잖아요, 1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내야 할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지 않고 계속 체납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요. 꼭 내야 하는 통행료만 내고 감면받을 수 있는 통행료는 빼고, 나머지 꼭 내야 할 통행료만 제대로 받자고 하는 것이고, 괄호 안 조항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통행자가 내야 하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장기간 내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런 징수 규정을……

○소위원장 김진태 그래서 1호 통행료의 감면 사실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 이것인가요? 그렇더라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사실상 통행료의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감면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통행료를 안 낸 사람들에게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받고 있고, 지금 감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광덕 위원 누가 현재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감면하고자 하는, 감면의 조치를 하려면 그 사람의 정보를 관리청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또 징수를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미납한 사람을 감액해 주거나 면제해 줄 때도 정확히 인적정보를 알아야 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것도 지난번 회의 때 주로 민간사업자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논이 많았는데, 그것이 지금 삭제된 대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항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재부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김진태 세무사법이 기재부 소관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 원장 제출)

(10시34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은 지금 세무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세무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잠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가 세무사로 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률다른 조항에서 보면 세무사 자격을,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은 부여하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해서 세무사 역할을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등록은 못 하지만 업무는 하고 있지요? 업무는 하는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업무를 하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소송과 관련된 업무, 여기 보면 법률사무에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무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그래서 그것이 현재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돼서 심리 중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현재는 또 다른 방향에서 갔을 텐데요.

○백혜련 위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항이……

여기 주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진태 일단 정부 의견 들어 보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재부차관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려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시긴 하셨지만 약간 좀 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 2003년도에 세무사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을 하면서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세무사 업무를 똑같이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명칭도 쓸 수 있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2004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은 주어지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2004년도 이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법상 세무대리업무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도 자동 부여를 폐지한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2004년도의 법 개정 정신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세무사법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침해나 아니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현재에서 이것이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공인회계사법 같은 경우도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조정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과고는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등록을 못 한다,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무사 등록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등록을 못 하면 기장대리업무나 심사청구업무 같은 것을 못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지만 등록을 못 하니까 그런 업무를 실제로 하지는 못 한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업무가 크게 이렇게 나뉘는 것이지요. 기장대리업무가 있고, 그다음 하나 더 나아가면 불복했을 경우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가 있고, 거기에 또 불복했을 때는 소송업무가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지금 현행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세 가지 단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기장대리업무를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는 소송업무를 못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못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못 하는 것이지요, 현행?

그래서 지금 소송은 변호사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앞의 기장업무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 업무를 2003년 이전의 변호사는 지금도 등록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이것을 못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요. 2003년 이전에 했던 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금태섭 위원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계속 하는 것이고요. 2004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그 업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장대행이나 세무조정을 지금도 못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현행도 그렇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문 정리가 됐다고 해서 새로 못 하게 되는 사람은 없고요. 기존에 못 하시는 분들의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고, 기존

에 할 수 있는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 개정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우리 전문위원, 맞아요?

지금 ‘할 수 있다’ 조항이 없어지는데 2003년 이전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왜냐하면 2003년에 개정을 할 때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개정을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세무사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세무사법은 2003년도 이전 분들은 다 보장을 해 줬고, 2004년도 분들은 그냥 자격만 자동 부여하고 등록을 못 하게 해서 제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부여만 없어지는 것이니까 2004년도 이후 분들은 실질에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 한 줄을 빼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2003년 이전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다른 특별 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칙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부칙에 있어서 이렇게 근거조항에서 빠지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조문 확인을 곧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변호사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동시에 자동 부여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물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서 세무업무, 변호사의 고유업무 속에서의 세무소송이나 다른 대리업무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격을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하면서 근본적으로 2004년도부터는 기장세무대리 같은 이런 등록을 못 하게 함으로써 제한되

어 있는 것을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것을 정리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법안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전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세무와 관련된 소송업무나 대리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신규 제한은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변리사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알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변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250시간인가 교육훈련을 받으면 변리사 등록을 해서 변리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들이 세무기장에 대한 다른 어떤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전혀 다른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무사 자격을 지금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009년도인가 법을 개정할 때 2004년 이전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 다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 조항을 개정해서 한 게 아니고 등록조항을 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등록조항만 손봐도 더 중요한 근거조항이 빠져 버리면 당장 상충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법적으로 보면 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럼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왜냐하면 앞에는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돼 있고 뒤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세무사업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반대로 이게 통과되면 앞의 근거조항에는 없는데 뒤에서 2003년 이전은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부칙조항에서 근거가 있다고,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찾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거라면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신설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2004년 이전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필요하다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저는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변호사 직역이기주의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를 하려면 변리사처럼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일을 해야지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주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나오게 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안 하더라도 2004년 이후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대리업무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이라고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서 지금 한창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2년 됐다면 이제 결론이 나올 때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근거 법령을 이렇게 썩 바뀌 버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만에 하나 위헌이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또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나는 그게 아니라면 위헌법률심판의 결론을 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오히려 여러 번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것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아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썩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진태 잠깐, 조웅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짚고 가려고요.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4년 이후 변호사들이 등록을 못 하게 한 그걸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거지요?

○조웅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주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주 17번 보시면 ‘제6조 및 제20조제1항’,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잠깐만요.

우리가 정부 측 의견을 물어봤는데 경과만 얘기하고…… 그래서 입장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아까 물어보신 걸 한 말씀 더 확인해 드릴 게 세무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서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빠진다 하더라도 2003년도 이전 분들은 이 경과규정에 따라, 2003년도 12월 31일 부칙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 세무사 자격 부여가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난다 하면 공인회계사와 같이 저희가 세무대리업무의 일부를 추가하면 똑같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법 개정안을 낸 것은 2004년도 세무사법 개정 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조문정리 수준의 법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이 만약에 위헌 결정이 된다면, 그건 공인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무대리업무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혼란은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잠깐만 현재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입법부가 입법을 할 때 현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

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법안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어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어요.

○백혜련 위원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태섭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제가 이것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어 보는 건데, 부칙을 저도 찾아봤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3조 3호 및 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2003년 이전의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돼도 앞으로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금태섭 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없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영역에 대한 자격 부여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법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전문 영역의 일을 맡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격증 부여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분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동시에 부여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위헌법률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무대리업무 영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또 개정하면 된다는 측면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저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기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법률가로서 변호사시험을 본 분들이 세무사시험을 본 분들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엄

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보고도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기본적으로 오신환 위원님의 의견·스탠스하고 방향이 같고요.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일관성, 입법의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에 법이 개정될 때 법 개정의 취지와 법 개정의 정신을 봤을 때는 2015년에 현재에 제기됐던 사건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대로 이 법안의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로스쿨 졸업생 문제, 변호사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분들이고…… 그 외에 로스쿨 교육과정도 제가 살펴보고 왔습시다만 세무사들의 기장대리업무나 그런 업무에 관한 어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해당 공직을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현재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4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세무사 업무인 기장업무도 하고 싶다, 심사청구업무도 하고 싶다 이래서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 그래도 필요한 국민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험도 보고 직무연수도 해서 누가 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맞는 그런 자격부여제도를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국가의 자격시험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2004년 이전 취득자지만 기장업무나 이런 등등을 등록해서 할 의사도 전혀 없고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법사위지만 전향적으로 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조금 더 실천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국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차관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로서 등록하고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변리사 중에는 그렇지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세무사 쪽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 관련한 실무수습을 마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하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무사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이용주 위원 극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법 개정안 자체는 2004년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된 부분을 저희가 조문정리를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와서 2004년도 이후의 변호사 자격자들에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세무사 업무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개정안을 낸 것은 2004년도 그 당시에 법 개정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일부 1차 시험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준다든지 그 전체적인 업무를 그냥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돼 있는 거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세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논의가 그때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부칙에 들어갔던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3조 3항을 삭제하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법안 자체가 자동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결로 왔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은 효과가 있되 자동 자격부여는 남는 결로 어정쩡하게 조문이 정리가 된 결로 이해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 입법의 명확한 취지가 2003년 이후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라든지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법이 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문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에는 관계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자동 부여가 되는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조문 모습을 정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입법 제안 취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문상으로 본다면 2003년도에 이런 식의 입법이 되었던 것은 입법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요. 만약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 변호사단체라든지에서 그 당시에 무슨 헌법소원을 내든지 바로 했겠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명확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진행해 가면서 현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의 제기가 나왔는데 해결이 안 돼서 2013년도에 이게 헌법소원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입법의 해석이 명확히 정해졌다고 한다면 바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변호사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더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법 개정 이후에는 이미 2004년도 이후 변호사분들께서는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셨고 그걸 하시려는 수요도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변호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들 잘 들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세무사협회를 기재부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상대 파트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협의 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듣지 못했고 또 거기를 소관하는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면 ‘지금 변호사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앞 전단계인 불복단계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대리 같은 것도 불가분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앞 단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랄까, 우리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엄청 늘어나서 젊은 친구들이 다른 직역으로, 세무사 변리사 온갖 직역에서 지금 이런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 변호사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모든 법률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곳곳에서 지금 이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게 다른 직역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 소신이 있고 하겠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해 왔느냐?’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나, 실제로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우리 법사위의 권한문제, 그다음에 소위도 마찬가지로인데 저도 지금 한 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체계와 자구수정 이게 우리 법사위와 법안소위의 원칙이잖아요? 우리 법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체계와 자구수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기재위에서 올라온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소위에서 이런 내용에 관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법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두 번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웅천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반대취지의 의견도 말씀하셨고……

○오신환 위원 반대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말씀하세요.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장이니까 그런 거지.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이면 위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영역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무사라는 전문영역의 직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 개정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법시험 존치 관련해서 특히 대한변협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왔고 거기랑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물음 속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데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소신 있는 말씀의 울림이 아직 남아 있고요. 저는 기존에 쓰지 않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 없이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이 또다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사법

시험 제도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 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그 로스쿨 출신들이 다른 직업에 업무 영역들을 확장함에 있어서 기존의 법 적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주광덕 위원 법사소위원들께 이게 정말 우리가 살펴봐서 현재 있는 세무사법의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 새로운 누구의 권리나 자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문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와 소관 업무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이유, 다른 내용을 거기에 붙여서 이 자체를, 지금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법사위원들이 우리 소관 업무에 관해서 법령 체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해 분명한 우리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직업으로 간다는 건데 그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이지 그로 인해서 어떤 법에 조문상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을 잘 정리하겠다는 것마저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입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법안 자체의 의미를 잘 유념해서 저는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여기 사실관계 확인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얘기 못하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보니까 기재부는 경과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자신 있게 정리도 못 해 오고 뭘 또 의사진행 중간에 오히려 끼어들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법사위와 법안소위의 권한, 권능이 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몇 개 법에 대해서 하니까 위원장이 그것은 법사위의 권한 밖의, 체계와 자구수정, 체계 조정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서 지적을 그냥 뭉개고,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었다는 지금 법마다 그렇게 달리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소위에서 이것은 보니까 자구가 수정된 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 소위의 권한인지 나는 그것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자구 수정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결론이 남에 따라서 법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보고 하는 게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은 법사위의 당연한 직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저도 이야기할게요. 어저께……

○조응천 위원 아니, 어저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윤상직 위원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나 입장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장들을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내려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17년까지 14년 동안 누더기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뒤가 조금 안 맞게.

그래서 정리하자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위헌결정을 기다리게 되면 이 조문이 정리 안 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조문 보고도 충분히 아는데 다시 확인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권리 관계를 전혀 안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인데 저도 변호사이고 휴업 중이긴 하지만, 팔이 안쪽으로 굽지만 그리

고 지금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형편들, 로스쿨 졸업생들 갈 길이 없는 건 알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이 세무사 일을 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를 안 시키면 정말 저도 법사위가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밝혀 두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자, 이제 됐지요?

지금 서로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취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것 통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법사위의 권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로 다른 기관, 부처 또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법체계와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또 변협의 의견 조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천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사건이 심리 중에 있는데 여기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 주는 것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견 하여튼, 그렇다고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좀 더 추후에 기일을 지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위원장님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시는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 심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장님의 뜻도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지만 이걸 막연히 만연히 하지 말고 다음 우리 법사위 법안2소위 할 때는 반드시 이 건은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가서 2003년도 법 개정할 때의 입법 취지가 정말 뭐였는지, 그 당시에 논의 과정은 어땠고 그 후에 지금까지의 상황 같은 것을 저희들도 한번 알아야, 오늘 꽤 긴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논의의 연속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도 동의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여기에 달라지는 게 없이 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간의 충돌 내지 불명확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은 우리 법사위 고유 업무인데 이렇게 소관 상임위 통과해서 대체토론을 거쳐서 2소위에 와 있는데 그 문제조차도,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현재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좀 간청을 드리는데 다음 2소위가 열릴 때는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여하튼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오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입니다.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시15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1페이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

의가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중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괄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준이력서에서도 사진 부착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사진 부착으로 인한 비용 등 수험생 부담을 고려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대규모 채용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사진 부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은 채용시험이나 면접에서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견해가 있고, 국가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도 아직 채용 절차에서 사진이 이용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심사자료에서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수험원서 접수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서 수험원서에 부착하는 사진도 실제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상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3페이지 표에 있습니다마는 4조의3 1호에 있는 괄호,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17조1항에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7조에서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 물품, 향응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이미 형법이나 해당 개별 법률에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또 다른 과태료 부과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즉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5페이지에 보듯이 과태료 부과조항 17조에서 단서를 달아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먼저 4페이지, 5페이지 과태료 규정 관련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표준이력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진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준이력서에는 사진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에서 금지하거나 거기다가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5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이력서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한 80% 되고 20%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부착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부착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중에 한 75%는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현장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표준이력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권장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금태섭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

은데요.

첫째로는 고용노동부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혹은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 환노위에서 통과해서 왔는데 이것을 지금 사진 부분을 빼다는 것은 완전히 자꾸 하고 체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과거와 달리 비용이 별로 안 든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까? 납득이 안 되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그게 있으면 환노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기업 중에 40%가 사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첫째로 그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것 해봤는데 막상 하게 되면 돈 있는 친구들은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것 가지고 이런저런 것 하다 보면 돈도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용모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1967년 이후로 사진을 붙이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맞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자는 것은 환노위에서 이 법을 여기다 보낸 취지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에는 저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규제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노위에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법사위에 가셔도 이 부분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제도 기간을 두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나 이렇게 제도 기간을 둔 후에 그 후에 하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진 안 붙이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40%가 붙이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40%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80%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80%라고 그랬어요.

○**금태섭 위원** 80%가 붙이고 있으니까 너무 많

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나 이렇게 제도 기간을 뒤서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하는 것은 어때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용 부담 이 부분은 방론으로서 검토의견 중의 하나로 마지막에 말미를 달아 놓은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앞에 보시듯이 이게 과연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채용서류를 받는데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기업에서 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걸 금지를 하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은 과도한 침해 아니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소위원장 김진태**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외모도 실력이야’, 외모지상주의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사진을 보고 아예 그 밑의 내용은 제대로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거나 혹은 예단을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실력 있는, 외모는 좀 달리지만 실력 있는 많은 청년들의 좌절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부모 재산도 실력이야, 뭐도 실력이야 이런 자괴감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노위의 이런 입법 취지는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그것은 환노위에서 하는 거고요. 취지는 면접시험 전까지는 외모가 판단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면접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것을 지켜 달라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퍼블릭 섹터에서 안 하는데 민간까지 강요하는 게 맞냐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정말 고용노동부가 원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가 이천 몇 년인지…… 어쨌든 보도자료까지 그때 배포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사진 안 붙이고 표준이력서처럼 이렇게 사진 없는 걸로 간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그다음에 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시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흐지부지하고……

아니, 부처에서 안 하고 있다가, 이때까지 그것

을 방기하고 있다가 그 방기한 것을 핑계로, 제대로 된 쪽으로 가자는데 자기들이 안 한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과하다, 이것은 맞지 않다.

청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해요. 그러면 전부 성형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포토샵 다 하고 머리 하고 옷 빌려 입고?

이것 청년들의 눈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법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잠깐만요, 제가……

우리 법사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항상, 오늘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거야말로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거다, 당장 헌법상의 여러 가지 원칙들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취지의 의견 가지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차관 상대로 확인 좀 할게요.

미국이나 EU의 국가에서 이런 용모차별금지의 일환으로 취업 등에 관해서 사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처럼 채용절차법이라는 법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저희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용모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국가가 법이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차별금지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다른 것을 하느냐……

아니, 소관 차관님께서 그 정도는 당연히 확인하시고 와야지 우리가 참고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채용절차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차별에 관한 것은 남녀 차별이라든지……

○주광덕 위원 금태섭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게 과연 인권 침해적인 것, 용모의 차이로 인한 어떤 차별금지 또 평등의 원칙 등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괜히 이런 엉뚱한, 실력이 아닌, 능력이 아닌 용모를 가지고 이것을 구별하고 차별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도 가장 합리적인…… 분명히 이런 용모로 인한 차별은 배제돼야 되는데 그것을 법률상 아니면 제도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우리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사진부착 금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윤상직 위원 제가……

○백혜련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김진태 아니, 윤상직 위원님이 아까부터……

○주광덕 위원 여기가 먼저.

○소위원장 김진태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 하십시오.

○윤상직 위원 사실은 지금 법에 사진부착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과잉규제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걸음걸이도 똑바로 걷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그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언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자면 성별이라든가 나이 또는 학벌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규정처럼, 예를 들면 용모라든가 그런 선언적 규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규범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응천 위원 그건 여기 있어요.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취지인지는 다 알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진 부착하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만, 몇 가지만 열거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취지는 알겠다 이거지요. 그러나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주광덕 위원 취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2007년에 표준이력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한 이력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그때 그 표준이력서 제정의 취지는 뭐니까? 제가 볼 때는 사진부착 이 논의가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표준이력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2007년에 저희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서 배포했었는데요.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이 있는 공개채용의 경우 이력서가 응시원서 또는 수험표의 기능을 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착 요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그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착할 수 있다고 그때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표준이력서를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 양식상에 사진란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요.

하여튼 저희 취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하고 젊은이들한테 금전적인 부담도 될 수 있고 또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과연 법으로 금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새삼 이번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표준이력서 보급하는 데 좀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조응천입니다.

자꾸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라고 하시는데, 노동부 내규 그런 것으로 표준이력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은 장관의 의지라든가 그때 당시의 세태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외과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법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규정을 뒤 가지고 계도를 좀 하고 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방향은 다들 옳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주무 부처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10년 전에 이미 방침

을 결정했으면서 지금 와 가지고 그때는 이런 거였고,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상당히 좀 무책임한 것 같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그때랑 지금 이랑 저희 기본방향은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도 기간을 두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소위원장 김진태 이것 좀 더 논의를 해 보지요.

○금태섭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진태 예.

○금태섭 위원 좀 더 논의를 한다 그러면 논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과도한 규제 말씀들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덧붙여 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항1호 삭제하자 그러면 출신 지역, 종교, 혼인 여부, 재산을 못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이력서에 쓰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주무 부처나 전문위원 의견에 의해서라도 남겨 두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지방에 근무할 때 그 도시에서 만든 기업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채용하라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아까 말한 선의로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고등학교 나왔는지를 이력서에 쓰게 하려는데 그것을 왜 정부가 막고 과태료까지 물리나,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채용에서 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규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이들이 힘든데 이게 과연 진짜 심각한 규제가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아까 외국에 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정확하게 조사를 못 해 보고 지금 핸드폰으로 좀 찾아보니까 67년도에 미국에서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Age discrimination), 연령제한금지법이 있거든요. 그 적용하는 것을 찾아보다 보면, 한국에는 칼럼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진부착이나 이런 게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이용주 위원 차관님, 이걸 다른 각도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용모나 사진

을 부착해야 될 특별한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사진을 꼭 받는 게 맞다고 보인다, 사진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0개 기업 조사했더니 한 20% 정도는 지금도 사진부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하여튼 업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얘기를 들었더니 그 경우에 주로 사진부착이 중요한 게 필기시험에서 본인 확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부착 안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해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는데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윤상직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준채용원서인가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일단 그렇게 하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용주 위원** 과태료는 나중에?

○**윤상직 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원래 부동산표준계약서도 처음에는 권장을 하다가 다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장한다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진이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붙이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고 하니까 권장사항으로 한번……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지금 위법이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그래요.

○**전문위원 강남일** 우선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 관련해서, 자꾸 사진에만 모아지고 있는데요. 개정안 4조의3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규제에 속합니다. 왜냐

하면 구직자에게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인자도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2·3호 쪽 내려오는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못하고 기업 스스로도 이것 정보수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것을, 기업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못 찾아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를, 법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진태** 소관 부처에서도 좀 더 다양한 절충점을 찾아 주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지금 의견도 많이 나뉘기 때문에 오늘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자부차관님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산업부2차관 우태희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11시38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무 내용을 추가하려

는 것으로 첫째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둘째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경제급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경·안전성 급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대체토론 요지가 있는데요. 그 요지는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환경급전의 원칙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터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했는데요. 보고 의무가 현행 규정에 있는데 후단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간단한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개정안과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경제급전의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는 게 입장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 자체도 산업위에서 그런 취지로 통과됐고, 그건 확인하고요. 그렇다면 수정의견의 문맥이 경제급전의 원칙을 변경하는 그런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 본문에, 수정의견 말고 본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 3조제3항에 “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런 걸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뒤하고 충돌이 있으니 이것을 표현만 바꾸어서 ‘전력시장 및 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면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자구수정입니다.

○조응천 위원 뭐라고요?

○윤상직 위원 ‘전력시장 및 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정도 하면 취지가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때’라 해 버리면 계속 그 시점마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체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고쳐서 하시지요, 뜻을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수정의견에서 ‘전력계통’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그래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혼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11시42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2페이지 중간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이러이러하게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농어

존특별법 여기서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개정안 22조의2를 둘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대체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하고 개정안 22조의2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넣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나요? 법을 발의한 사람이 이 조항을 넣자고 발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뭘 이유가 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의자의 의도를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주광덕 위원 발의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도 일응 맞는 말씀이지만 법체계 전반을 다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백혜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예요?

○주광덕 위원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건데, 우리가 법사위의 고유업무인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말은 각 법률 간의 중복된 법률 규정 그런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충분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주민복지법보다 상위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그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 개별 법률에서 또 이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법체계에 더 맞는 것이고요.

또 그 문제는 저희 고유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납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혜련 위원 이 법을 발의하신 분께서 꼭 넣기를 원하는데……

○주광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우리 법사위……

○백혜련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법안 발의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특별하게 충돌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일반법과 특별법의 충돌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수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반법에 그

내용이 있고 특별법에 좀 더 정확하게 넣는 규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 중복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뜻은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만약에 법 내용 안에다가 중복되게 넣는다면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자구상 그것이 다른 법률하고 정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더라도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크게 법에 훼손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신 분 어떻게 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식약처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유무영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마지막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8분)

○소위원장 김진태 의사일정 제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

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선조치명령 및 일시 영업중지명령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의 요지는 영업중지명령제도의 요건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고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중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요건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많이 맡겨져 있어서 개선조치와 영업중지명령에 대한 자의적 집행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집행을 당하는 사람, 해당 영업자의 입장에서 권리구제수단은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이의제기에 따른 영업중지명령의 효력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에 각 개별법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첫째, 일차적으로 개선조치명령을 하고 그 개선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영업의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제3조 위반의 경우는 삭제하고, 영업중지명령을 바라는 주체하고 그에 대한 판단주체를 구분해서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른 법률에는 없는 최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수정된 안에서는 지방식약청장이 발한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식약처장이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이 발한 영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심사를 하도록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심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의 일시중지명령이 지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중지명령의 회피수단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기각된 이후에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는 어떻

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문제가 영업의 일시정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선조치는 다급한 사정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데 그 개선조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营业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요건이라든가 이의절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비는 했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검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나 걱정이 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체도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오신환 위원 정부 의견을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의견이요.

○식주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정부 쪽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수정의견 다 동의하고 있고요.

잠깐 위원님께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식품 쪽의 어떤 불량식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의 상태는 사실 생각보다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은 조금 신뢰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기업에서 중량 변조,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유효기간 변조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소위 행정처분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급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일시중지명령이라는, 이게 미국에 있는 제도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의 시급성은 사실 정부로서는 느끼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워낙 잘 검토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량권이 발휘되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의불복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됐기 때문에 차제에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결성을 기할 필요가 있

다 싶어서……

○전문위원 강병훈 조금만 더 검토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것은 다음 기일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부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금 태 섭	김 진 태	백 혜 련	오 신 환
윤 상 직	이 용 주	조 응 천	주 광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강	남	일
전 문 위 원	강	병	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	상	목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	태	희
보건복지부차관	방	문	규
고용노동부차관	고	영	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	정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	무	영